

기본소득정치연대 12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9. 5. 30.(목)

* 온라인으로 진행
(운영위원회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 이용)

보고 안건	1	전차 운영위 결과 보고 및 활동 보고
	2	조직 및 재정보고
논의 안건	5월 운영위 별도 논의 안건 없음	

* 성원 : 홍세화, 용혜인, 김준호

1. 11차 운영위원회 결과

- 사무처원으로 오세한 회원을 인준하고 매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함.
- 5월 1일 제2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기획과 집행은 사무처에서 담당하기로 함.
- 노동, 토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관련 단체에 공동주최를 제안하기로 함.
- 1기 대의원 보궐 선거를 상정된 안에 따라 선관위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2. 활동 보고**1) 5월 1일 노동절 - 기본소득 캠페인**

- 기존 집회 기획을 수정하여 정당연설회 및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함. 기본소득 관련 유인물을 중앙당과 함께 배포하였으며 다양한 직종을 상징하는 코스튬을 하고 발언과 피켓팅 등을 진행함.
- 현장 상황으로 인해 기획된 캠페인과 정당연설회를 모두 예정대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인물 배포 및 코스튬 캠페인 진행을 통해 기본소득을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선전할 수 있었음.

2) 1기 대의원 보궐선거**□ 진행 경과**

- 4/15 선거 공고. 4/23 ~ 4/24 후보자 등록 : 오세한 회원, 윤재민 회원 출마
- 4/25 ~ 5/5 : 선거운동 진행 : 4/30 윤재민 후보 개인 사정으로 사퇴
문자/이메일 각 2회 발송. 공보물 2회 배포
- 5/6 ~ 5/10 투표 진행 : 67/102 투표 (65.7%)
찬성 66/반대 1 오세한 회원 당선 (98.5 득표)

3) 기본소득 부속 강령 제정 모임**□ 진행 경과**

- TF 구성 및 운영 안내 : 4/19 온라인 포스터 발행
- 4/25 : 1차 모임. TF 운영 일정 및 방향 논의
- 5/3 : 2차 모임. 1차 세미나
- 5/12 : 3차 모임. 2차 세미나 및 개요 토론

- 5/16 : 기본소득 부속 강령 초안 검토.

□ 향후 계획

- 온라인 피드백 : 회원 및 노동당 당원 대상 온라인 피드백 진행 및 초안 수정
- 7/7 노동당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발의로 안건 상정

□ 별첨 : 기본소득 부속 강령 초안

4) 주간 기본소득 뉴스 브리핑 및 카드뉴스 발행

- 주간 뉴스브리핑 진행 중 : 보궐선거, 관련 뉴스 없음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4월 말 ~ 5월 중 4회 가량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함.
- 4월 25일 :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아동수당 등에 관한 카드뉴스를 발행함.

5) 향후 활동 계획

□ 6/6 전국위원회 사전 안건설명회

- 일 시 : 6월 4일 오후 7시
- 장 소 : 소박한 자유인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30길 7-4 2층)

보고 2

조직 및 재정 보고

: 전차 운영위 결과 및 활동 보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1. 조직 보고

지역	회원 수	증감
총원	145	-
서울	58	-
경기	24	-
인천	14	-
충북	2	-
충남	11	-
대전	6	-
세종	0	-
전북	5	-
전남	7	-
광주	5	-
제주	3	-
경북	1	-
경남	0	-
부산	2	-
울산	3	-
대구	3	-
강원	0	-
해외	1	-

* 4월 5일 제11차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회원 변동 없음.

2. 회계 보고 (2019. 05. 30. 기준)

일시	통장 기재내용	내역	수입	지출	잔액
2019. 04. 01	-	이월금	0	0	4,429,238
2019. 04. 01	너머	4월 월세	0	100,000	4,329,238
2019. 04. 01	김준호	사무처장 활동비	0	400,000	3,929,238
2019. 04. 18	(주)다우기술	문자 충전	0	50,000	3,879,238
2019. 04. 30	(주)연대와전진	깃발 제작	0	30,000	3,849,238
2019. 04.30	노동당	4월 교부금	840,000	0	4,689,238
2019. 05. 03	김준호	사무처장 활동비	0	400,000	4,289,238
2019. 05. 03	오세한	사무처원 활동비	0	100,000	4,189,905
2019.05.21	너머	5월 월세	0	100,000	4,089,905

총 액	840,000	1,180,000	4,089,905
-----	---------	-----------	-----------

[기본소득 부속강령] 공유부 배당,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동학, 플랫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내재된 위기가 외화되면, 그 위기에 조용하여 자체적인 혁신을 수행한다. 1970년대의 경제위기는 노동의 유연화와 린 비즈니스 모델¹⁾의 도입을 통해 극복했고, 1990년대의 거품 붕괴는 이자율 인하와 느슨한 통화정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자율 인하와 느슨한 통화정책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로 거대자본들이 눈을 돌리게 했고, 이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자동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이윤창출 매커니즘을 만들려는 부단한 노력을 했고,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 창출이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동학이 등장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동학의 핵심은 기존 이용자를 통해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윤이 늘어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²⁾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필연적으로 독점화를 불러온다. 또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쌓이는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빅데이터는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낸다. 결국 플랫폼 자본주의는 거대한 독점 디지털 자본들을 양산한다. 그리고 이런 독점 디지털 자본들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여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한 이윤을 독점한다. 결국 플랫폼 자본주의는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극단적인 집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한 빅데이터로 창출한 가치를 자본이 독점하는 분배정의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자동화의 가속화를 통해 생산성은 증대하지만 고용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3년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고용의 미래〉 보고서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일자리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지,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상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존의 일자리들이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 경제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자동화-을 추동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약한다.

러다이트 좌파가 될 것인가,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상식을 만드는 좌파가 될 것인가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위기를 만들어낸다. 플랫폼 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 구조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좌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조적 변화 자체를 막고 되돌리려는 경향과 이 변화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현실화시킬 기회로 바라보는 경향이다.

자동화의 확산으로 총 일자리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양극

1)

2)

화가 발생한다. 변화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 소수의 숙련 노동자들만 일할 수 있는 고 임금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대신,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만을 갖게 하거나 그조차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 경향은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슬로건으로 드러난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공 세적으로 대응해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인민의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임금노동 일자리를 지키는 수세적 요구만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임금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할 노동력 절감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혁명시기 기계를 부수고자 했던 러다이트 운동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좌파의 요구가 ‘더 많은 임금노동’ 혹은 ‘안정적인 임금노동’에만 국한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생존 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들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요구는 ‘더 많은 임금노동’ 즉, 더 많은 인간의 상품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몫에 대한 정당한 배분, 그리고 자본의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해방을 위한 기술의 발전이다.

물론 자동화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을 임금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도 식적인 낙관은 어떠한 변혁의 가능성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 정치의, 공유부 배 당 정치의 필요성이 등장한다. ‘더 많은 임금노동’, ‘더 많은 인간의 상품화’가 아닌, 체제 변혁의 전망을 갖고 공유부에 대해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데이터’를 동력으로 한 자본주의의 혁신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공유부 정치를 펼 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플랫폼 자본주의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이다. 공유부란 개개인의 기여정도를 따질 수 없으며, 특정 개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 다시 말해, ‘모두의 몫’이다. 모두의 몫을 특정인이 혹은 특정 자본이 전유하는 것은 부정의하며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역사적으로 공유부 배당이라는 아이디어의 원천은 18세기 말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인은 상속재산에 10%의 상속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21세가 되는 성인에게 1회에 한해 15파운드를 지급하며 5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10파운드씩 지급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페인은 현 금을 지급하는 이 계획에 대해 “자연적 유산 대신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확립으로 인해 자연적 유산인 토지를 박탈당했고 “권리로서 모두에게 속하는 자연적 유산”을 되돌려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인의 ‘자연적 유산에 대한 권리’ 개념은 이중적 소유권 개념에서 비롯한다.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고, 사유재산권이 확립된 이후에도 ‘자연적 소유’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자연적 소유권을 인정 한다면 공유부의 배당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부조와 달리 각자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분배정의 차원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공유부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다시 중요한 논의로 등장했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빅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거대 플랫폼 자본이 독점하며, 노동자 계급에게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글로벌 5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페이스북은 12만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 1962년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였던 GM이 60만 5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할 때 왓츠앱은 55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은 10억달러에 인수될 때 13명만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플랫폼 자본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적 플랫폼 자본들에 대한 직접 조세를 통해 재분배하는 것 역시 난망한 대안이다.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자본들의 특징상 조세회피가 더 쉽고, 과세는 더 어려워졌다. 가장 세금이 저렴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서버를 두고, 각국의 지사들은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OECD나 EU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합의된 국제규범을 도출하기 어렵다. 결국 변화하는 자본의 동학에 대응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상, 공유지분권을 통한 기본소득

우리의 새로운 상상력은 ‘빅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다’라는 인정에서 시작한다. 개인들이 생산한 데이터 그 자체로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와 목적에 맞게 재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랫폼 자본은 이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빅데이터의 원천인 개인들을 플랫폼 소유와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이윤으로부터 배제한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유지여야 하며, 공유지로부터 나온 이윤은 공유지의 소유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플랫폼 자체를 사회 전체의 공유자산으로 바꾸거나, 빅데이터를 사회의 공동소유로 보고 플랫폼 기업에게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나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때 빅데이터에 대한 지분권은 주식처럼 개별 소유자들이 처분가능한 지분권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은 빅데이터 공유지분권을 설정하고 빅데이터 발생한 이윤을 거둬들여 빅데이터 기금같은 법률적 형태를 부여하고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임스 미드는 ‘자산의 사회적 소유정책’으로서 사회 전체 주식자산의 50%를 국가가 소유하되 경영권이 아닌 배당권만을 행사하여 이 수익을 ‘사회 배당(Social Dividend)’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미드의 사회배당 모델을 플랫폼 자본에 적용한다면, 플랫폼 자본이나 플랫폼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 50%의 공유지분권을 설정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은 모두의 것인 데이터를 사적 소유로 전환하는 인클로저를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소유권 혁명을 가능하게 하며, 공유부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평등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적 소유를 국가의 소유로 바꾸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방식과도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우리의 공유부 정치는 임금노동이 아닌 빅데이터로의 가치 창출 원천의 변화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모두의 것인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 즉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은 이는 과거의 사회주의를 추억하는 혹은, 과거의 자본주의 동학을 가정하는 현실과 괴리된 운동이 아니라, 현재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본소득을 통해 만들어갈 플랫폼 자본주의 이후 해방의 모습은 임금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 활동과, 플랫폼으로부터 창출된 가치의 사회적 공유일 것이다.